

## 근대 불교의 이해

(불교계의 분규)(1954~1960)

해방 공간 불교 혁신의 실패, 6.25전쟁 기간의 불교 위축 등은 이후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을 제약하였다. 더욱이 1952년 봄 승려 이대와의 건의서로 제기된 비구, 대처간의 사찰 양도 문제의 결렬은 자율적인 타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대와의 제의란 무엇인가?

선학원 계열의 이대위가 52년 봄 당시 중정이었던 송중헌에게 제출한 장문의 건의서에서 일본 불교 침투 이후 불법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를 해결할 방안으로 청정 비구 전용의 사찰을 할애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논의되어 불국사의 법규위원회에서 수좌들에게 18개 사찰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18개 사찰 가운데 본산급 사찰은 제외되고 유명무실한 대상 사찰만을 준데 대해 선학원의 수좌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수좌들의 불교 혁신의 골자는 대처승 축출이라는 왜곡되고 편협된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1954년 5월21일, 이승만의 제1차 불교 유시 담화 이후 불교계는 비구, 대처간의 대립과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타협과 양보의 부재 이후에 가시화된 타율적인 문제 해결이었다. 더욱 문제시 된 것은 이승만의 유시 이후 나타난 사태에서 불교적인 접근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의 법에 의지하고 심지어는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를 야기하였음은 불교의 명예를 저버린 처사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부터 시작된 불교계 분규(정화, 법난)는 불교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불교 재산을 망실시킨 해방 이후 최대의 치욕이었다.

한편 이승만이 불교의 정화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분분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정리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승만이 관악산 연주암에 들렀을 때 그 사찰에 대처승이 살고 있었던 정황, 충남 논산의 관축사에서 머리를 기른 주지승을 만난 기연, 남한산성 장경사에서 아기 기저귀 목격, 서울 정릉의 경국사는 대처승려가 없었기에 청정한 수행도량으로 인식,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개입설, 범어사 하동산의 건의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전쟁직후 혼란한 사회를 통제할 정책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승만 집권 당시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한 반면 불교는 내적인 갈등과 후유증으로 큰 침체를 겪었다.

비구측에게 인계한다는 18개 사찰을 전혀 인수치 못한 비구 수좌들은 이승만의 유시가 내려지자 그를 불교 정화로 활용키 위한 기민한 대응을 하였다. 여기에는 농지 개혁으로 크게 위축된 사찰 경제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농지 개혁 이전 사찰 주도권을 갖고 있던 대처승들에 의해 선원은 미약한 지원을 받아, 수좌들은 더욱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이에 그 해결이 종단 내에서 거부되자 절치부심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한편 이승만의 유시는 대처승의 축출을 의미하였다. 이승만의 정화 발언은 국가 권력의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기에 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승만 발언을 적극 찬성하고 수용한 수좌들은 이를 불교 정화로 삼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선학원 수좌들은 불교 정화 운동 발기, 정화 운동을 동의하는 승려의 조직, 재경 비구승 중심의 교단 정화운동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불교 교단 정화 대책 위원회 등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1954년 8월 24일 선학원에서는 65명의 비구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비구승 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대회에서는 불교 정화의 방침을 정하고 종헌의 제정 위원과 정화 대책 위원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결의된 내용은 교단 정화, 도제양성, 총림창설이었다. 당시 대회를 마친 비구측 대표 이효봉, 이청담, 정금오, 김적음 등은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의 뜻을 확인하였다.

한편 종권을 장악한 집행부측에서도 이승만의 유시가 있자 일단 승단을 수도승단과 교화승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종헌을 제정하였고, 비구승에게 할애할 대상 사찰에대해서도 격론을 벌이면서 토의한 결과 48개 사찰을 비구측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해 9월 29일에 개최된 중앙총회에서는 비구승에게 종권 양도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였다. 그 결과는 현실을 수용하자는 안의 채택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강경론자들은 '비구승들은 빨갱이 집단이니 해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흥분한 비구승들은 11월 10일 태고사 점거에 나섰다. 그 점거는 11월 6일 이승만의 유시, 즉 왜식 종교관을 버리라는 발언에 힘입은 바 크다. 비구승들은 태고사의 간판을 철거하고 조계사의 간판을 부착하였다. 이로부터 양측의 간판 철거와 부착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행태가 계속되었다.

그후 비구측은 불교정화를 위해 수차례나 경무대를 방문하고, 태고사(현 조계사)입주, 점거 시도 등을 추진하였다. 대처측은 국회에 청원서 제출, 태고사 재탈환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종단 주도측도 대세에 의해 독신승 중심의 사찰 운영을 선언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정화에 대한 유시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계속하여 표명하였다.

그런데 당시 비구측은 기존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종헌을 1954년 12월 11-13일 전국 비구비구니대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대회에서 통과된 종헌에는 대처승을 호법대중으로 표현하고 대처측과의 차별을 위해서 조계종의 종조를 보조국사 지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비구측의 보조 종조론과 대처측의 태고종조론이 대립하였던 것이다. 비구측의 논리는 환부역조로 지칭되면서 대처측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당시 종정이었던 송종헌은 비구, 대처간의 대립이 치열한 그즈음에도 수행승과 교화승의 일심동체를 통한 종단 운영이 불교의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그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물론 그도 종단과 사찰의 운영은 청정비구인 수행승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첨언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던 것은 불교 교리에 대한 해석의 자의성, 비구, 대처 양측의 자기 중심적인 사찰 운영권 장악 의지가 개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으로 가자 주무부서인 문교부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였다. 더욱이 대처측을 후원하였던 국회의원 김법린, 이종욱, 최갑환, 최범술은 그 자신들이 대처승의 이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불교계의 분규는 국가 권력을 내세운 비구측과 국회를 방패로 한 대처승간의 대립의 성격도 갖고 있었기에 그 추이는 간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교부는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1955년 2월 4일 문교부 장관실에서 양측의 대표 각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정화수습대책위원회가 열렸다. 기존 종단인 총무원측(대처)에서 권상로, 임석진, 김상호, 이화응, 이정암이 선학원(비구)측에서는 이효봉, 이청담, 손경산, 박인곡, 윤월하가 참석하였다. 당시 그 회에서 결의한 승려 자격 8대 원칙은 독신자, 삭발염의자, 불구가 아닌 자, 백치자가 아닌 자, 3인 이상의 승려단체 생활을 하는 자, 4대 범계(살, 도, 음, 망)를 하지 않는 자, 술과 고기, 담배를 하지 않는 자, 25세 이상인 자 드이었다. 이후 정부(문교부, 내무부)에서는 원칙계 의거, 사찰 정화대책 실시 요령을 통첩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그 조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비구측의 단식 투쟁, 대처측의 교화승 위상 조정 등이 그 암초였다. 또한 그 와중에서 양측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한편 대처측은 그 대립의 근거지를 법륜사로 옮겨 독자적인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문교부에서는 양측을 조정하기 위해 사찰 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비구측은 이효봉, 이청담, 정금오, 최원하, 윤월하였고 대처측은 김상호, 국성우, 이화응, 박대륜, 원보산이었다. 이후 그 위원회는 5차례나 개최되었으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문교부는 비구승 중심의 사태 해결에 나서 비구측이 점차적으로 사찰의 접수에 나섰다. 이에 힘입은 비구측은 1955년 8월 12일 773명의 승려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이전에 제정한 종헌을 부분 수정한 새로운 종헌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른다. 이 승려대회에서 종정에 설석우, 총무원장에 이청담, 총무부장 김서운, 교무부장 신소천, 재무부장 박기종, 조계사 주지에 이대익이 선출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당국자가 그 승려대회를 인정하는 정책이 개입되었다. 대처측은 마침내 문제를 법원의 소송 제기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후 각 사찰에서는 비구, 대처간의 사찰 장악을 위한 유혈충돌이 있었고, 간혹 승려의 자살 소동이 일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처승들의 수많은 이혼이 봇물처럼 등장하여 세인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또한 양측이 세속적인 법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한편 정부의 비구승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각 사찰 및 교계 사업을 담당한 기업체, 재단의 재정은 상당부분 대처승측이 관리하였다. 그리고 승단이 비구, 대처로 양분되자 신도들도 그들과 인연있는 측으로 이원화되었다. 이같은 불교계의 대립은 완전 양분을 의미한다. 1959년 1월 5일 비구, 대처측이 분쟁 종결을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노정화한 분규가 4~5년 지속되는 가운데 불교의 위상은 추락하였고, 불교의 수행, 포교, 사업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교 정신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변화를 제공한 것은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었다. 비구승을 옹호한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처승측은 그간의 울분과 설움을 일거에 노출시켰다. 이에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대처측 승려의 점거가 나타나면서 승려간의 충돌이 재연되었다.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등 전국 주요사찰이 다시 대처측의 손안에 들어가는 등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대처측은 '비구승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내를 행진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비구측 총무원은 1960년 5월 연석회의와 임시 종회를 개최하여 정화이념 확립 방안 강구 등 그 대응책을 모색했다. 4.19발발로 인해 비구측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야만 했다. 이에 그 종회에서 종회를 상,하 양원으로 나누고 상원은 출가 대중, 하원은 재가 대중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재가 대중은 대처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효봉)를 결성하였다. 대처측은 변화된 현실의 위세를 배경으로 비구측 총무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직무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을 서울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구측은 1960년 11월 19일 제2차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종권 소송에서 대처측이 승소할 경우 순교, 항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불법에 대처승없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 행진을 하였다.

또한 고은은 '제2차 승려대회를 지내며' 라는 부제에 '순교자의 노래'를 대한 불교 11호에 기고하였다. 승려대회 직후에는 정화를 완수하겠다는 비구측 소장 승려 12명이 순교단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11월 21일 조계사에서는 비구측 입장을 지지하는 전국 신도 비상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비구측 승려들의 단식 농성이 있었다.

비구 대처 양측의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된 가운데 대법원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고, 양측의 논리를 주장하는 구호가 난무하였다. 특히 대처측은 불교분규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이승만 독재자의 불법 유시로 종권을 유린당했으며 시대가 변화하였기에 비구승은 물러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24일 대법원은 대처측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종헌 등의 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판결(피고 비구측 승소)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 내용은 고등법원이 당사자 적격을 오인하여 본안 심리는 않고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비구측 승려 500여 명이 법원에 난립하였고, 승려 6명(문성준, 유월탄, 정성우, 김도현, 권진성, 이도명)이 대법원에서 '순교'라는 이름으로 할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비구 승려 24명이 기소되었다. 대법원 난입 사건은 비구, 대처 간의 분규가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실례였다.

또한 이 같은 오욕이 얼룩진 분규가 지속되면서 비구승과 대처스의 사찰 쟁탈전은 극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반 사회의 불량배, 깡패, 무위도식자 등 성직자로서 부적격자가 교계에 유입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최소한의 교육과 수행도 없이 승려가 된 그들의 행태와 의식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점차 교계의 중진으로 성장하였을 시의 제반 모순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정화의 이념이 타당하여도 그 추진 방법의 오류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동아일보(58,7,17)가 그 분규를 보도하면서 '대처승들 물러 나갔을 뿐 신도 늘었다는 표적 업소'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구, 대처 양측의 사찰 재산 탕진을 '서로 팔아 치워 자원 고갈 사찰은 유원지화 승리의 기쁨보다 앞서는 곤경'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규 속에서 특기할 것은 종단을 위호한 전국신도회가 출범하였다는 거시다. 김한천을 중심으로 한

전국신도회 결성준비위원회가 1955년 8월에 결성되었으며, 1956년 6월에는 전국신도회가 등장하였다. 신도회는 비구승단을 외호하면서 기관지 '법륜'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대각사에서 고광덕, 황산덕, 이종익을 중심으로 불교 강좌를 개시하면서 그를 1956년 9월에는 대각회 창립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1956년 10월에 발족한 선수행 위주의 달마회가 박고봉과 이행원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중,고교생의 신행 단체인 녹야와 불자 부인회인 마야 부인회와 선우회도 1957년 결성되었다.

한편 선진규를 비롯한 일단의 학생 31명(김지견, 김영태, 김인덕, 박완일, 김기업 등)은 불교의 혁신을 기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즉 그들은 김해 봉화산에 호미를 든 관음상을 혁신운동의 심볼로 삼고 그를 통하여 교단 분규를 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였다. 당시 동아일보(1959,3,13)에서는 이를 '젊은 학도들이 불교 혁신 운동'이라고 보도하였다.